

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대·내외 경제 전망¹⁾

□ 세계 경제 전망

-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,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선진국은 2%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
 -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,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
-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금융시장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더욱 약화 우려
 -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,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

<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, IMF, '16. 7월 >

(단위 : %)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세계	3.1	3.1	3.4	3.6
- 선진국	2.3	1.8	1.8	2.2
- 신흥국	4.3	4.1	4.6	4.7

1) '16. 7월 주요 경제지표(기획재정부)

□ 국내 경제 전망

-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,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.7%, 2017년에 3.0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(IMF)
 - 다만, 최근 영국의 EU 탈퇴,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
- 세입여건은 비과세 · 감면정비,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
 -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
-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,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
 -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
- 수지 · 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%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
 -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·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
 -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

2. 국가 재정운용 전략

□ 재정운용 기본방향

○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강화

-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강화
-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,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
-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출산·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

○ 건전재정 운영의 제도적 기틀 마련

-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제도적 기틀 확립
- 국가, 지자체, 사회보험,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 제정 추진

○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

-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·중복 통폐합을 지속 추진해 나가
고, 민간투자사업에 새로 도입된 사업방식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에
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
- 세입 확충을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
실시하여 성과가 낮은 비과세·감면제도는 정비하고, 지하경제 양성화
를 지속 추진

□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일자리,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
 -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,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 확대
 - 고용디딤돌 등 청년·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,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경제, 문화에 대한 재정투자 지속 지원
 -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,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
- 북한의 도발, 테러 등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안보·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안심 사회 구현
 -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, 아동·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
-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, 산업·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
 -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, 위험분담*·손익공유**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 추진
 - * (BTO - risk sharing)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
 - ** (BTO - adjusted) 정부가 최소한의 위험 분담, 초과이익 발생 시 공유
-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, 6차산업*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
 - * 농어업 생산·가공-유통-관광·체험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

□ 향후 재정개혁 추진방향

- 「(가칭)재정건전화특별법」 제정 등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
-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가 즉시 시행하기로 한 바, ‘신규사업 선정→집행관리→평가’ 등 재정全过程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
 - 우선, 비보조사업(100억원 이상)에도 사전심사를 도입
 -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여 비효율·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 실시
 - 금년 도입된 ‘보조금 One-Strike out’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

3. 중기세입 여건

-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,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
- (지방세) 비과세·감면 축소,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
 - 영국의 EU 탈퇴, 국제금융시장 불안,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예상
 - 부동산경기 등으로 징수액이 증가가 예상되나, 경제성장 하락전망 실현 시 전년 수준 예상
 -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
 - * 자가변동률 : '13년 1.14% → '14년 1.96% → '15년 2.40%

- (세외수입) 과세자료 연계, 체납액 일제 정리,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·공개제도 등으로 증가 전망
 - (지방이전재원)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
 - (국고보조금)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·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,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
-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 전망

4. 중기세출 전망

- 취약계층 보호,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지속 증가
 - '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, '15년 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개편,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 증가
 -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,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·고령화 사회 대비
 -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
- 소방 및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 증가
 - 재난 및 안전관리,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 투자 확대
 -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 조성 등 문화융성 투자 확대
-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
 - 도로·교량·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
 - 자연환경 조성,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, 상·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